2025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665

제안연월일 : 2025. 12. 18.
제 안 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제안이유

○ 2025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에 각 부서별로 진행된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 2025. 11. 18. ~ 11. 25. (8일간)
3) 감사대상 부서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 미래문화국
     (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문화도시과,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
   - 강남복지재단
   - 강남문화재단
4) 감사실시 경과
5)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총괄
6) 부서별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1. 목적

❑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의 집행실태를 검증하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5. 11. 18. ~ 11. 25. (8일간)

3. 감사대상 부서

■ 복지생활국(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 미래문화국(디지털도시과, 스마트정보과, 문화도시과,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

■ 강남복지재단

■ 강남문화재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사무보좌
김현정	우종혁	전인수, 한윤수, 윤석민, 김형곤, 오온누리	전문위원: 이미영 의사팀장: 송원종 의사진행: 최은영 정책지원: 이채원 외 3인 속 기 사: 이용순 외 2인 사무보조: 강성미

나. 주요 감사내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이내의 사무
- 국가 · 시 위임사무 (국회 또는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제외)
  - ○ 2024년도 하반기 및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 ○ 2024년도 결산 심의와 관련된 주요업무 사항
  - ○ 불용예산 현황 및 사유
  - ○ 2024,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에 의한 국·과별 주요사업 추진결과
  - ○ 외부감사(서울시, 감사원 등) 및 자체감사 내용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내역
  - ○ 각종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제반의 구정업무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일시		감사 대상기관 및 내용	감사장소
11.18. (화)	09:30 10:00 14:00 16:00	○ **현지확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강남어린이회관, 서울형키즈카페 강남구 역삼1동점 수변문화쉼터	현장소재지
11.20. (목)	09:30 10:00 12:00 14:00	○ 감사장 도착, 감사준비(위원회 예비토의) ○ **감사실시 선언** : 출석 공무원 선서 ○ **2025 주요업무 현황 보고** - 복지생활국, 강남복지재단 ○ **복지생활국 소관 감사실시** -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중 식) ○ **복지생활국 소관 감사실시** -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구 청 감사장
11.21. (금)	09:30 10:00 12:00 14:00	○ 감사장 도착, 감사준비(위원회 예비토의) ○ **복지생활국 소관 감사실시** -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중 식) ○ **2025 주요업무 현황 보고** - 미래문화국, 강남문화재단 ○ **미래문화국 소관 감사실시** - 스마트정보과, 생활체육과	구 청 감사장

감사일시		감사 대상기관 및 내용	감사장소
11.24. (월)	09:30 10:00 12:00 14:00	○ 감사장 도착, 감사준비(위원회 예비토의) **○ 미래문화국 소관 감사실시** - 디지털도시과, 관광진흥과 (중 식) **○ 미래문화국 소관 감사실시** - 문화도시관, 강남문화재단	구 청 감사장
11.25. (화)	09:30 10:00	○ 감사장 도착, 감사준비(위원회 예비토의) **○ 종합보충감사** **○ 강평 및 감사종료**	구 청 감사장

라.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수감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증인선서

○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 감사실시(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질의, 답변)

○ 강평 및 감사종료 선포

마. 증인 출석사항

○ 복지생활국장, 미래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가족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디지털도시과장, 스마트정보과장, 문화도시과장, 생활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5.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총괄

기관별	계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
계	**151**	**107**	**44**
복지생활국	79	57	22
미래문화국	55	39	16
강남복지재단	8	4	4
강남문화재단	9	7	2

6. 부서별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부적절 집행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철저 - 지적 사항이 상당한데 전문가가 많은 상황에서 감사 지적이 속출하는 것은 지도감독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 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시정
2. 회계지도·점검 반복 지적에 대한 근본적 개선 요구 - 동일 유형의 위반 사항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이므로 단순 지도가 아닌 구조적 개선 조치 마련을 강구할 것. - '전문가 감사 미선임'과 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정 준수 체계를 확립하기 바람.	시정
3. 민간위탁 관련 - 수서,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은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상당했음에도 '기관 바꾸기식' 재위탁이 이루어졌음. 복지관 재위탁 시 지적 사항 해소 여부 반영 제도화를 검토하기 바람.	시정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4. 푸드지원센터 지역 간 이용자 편차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시정 - 대치동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급감한 원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이 부족함. 지역별 수요 차이에 대한 정밀 진단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특정 지역의 이용 감소 현상을 고려하여 지역 간 수요·접근성 분석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중심의 관리·배분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시정
5. 이동푸드 운영 공백의 구조적 보완 필요 - 일부 기간 실적이 없었는데 기후·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 체계를 보완할 것.	시정
6. 사회복지시설 재배치 관련 - 사회복지시설 수요변화 분석 및 전략적 재배치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시설의 지역 편중이 없도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시설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시정
7. 국가보훈대상자 장례 서비스 관련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와 관련하여 온라인 신청 절차, 예산 집행의 투명성, 품질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됨. 형식적 예우를 넘어 실수요자 만족도를 반영한 개선 기준을 마련하여 장례서비스의 품격을 높일 것을 요청함.	시정
8. 월남전참전유공자비 건립 촉구 - 월남전참전유공자비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	건의
9. 보훈수당 등 관련 -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원 확대가 시급하므로 보훈수당 인상 대상을 8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훈단체위문금도 월 6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
10. 고독사 관련 - 2021년 7명에서 2024년 20명으로 고독사 관련 의심 사례가 증가함에도 2025년도 고독사 의심 건수 전망과 감소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함. 신사동 반지하 등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50대 중장년·청년 고독사 등 유형별 원인 분석과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무업청년·쉬었음 청년 등 증가하는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하고, 근로빈곤층 중심의 고독사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함.	시정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1.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 사전 예방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또한 정신·정서적 위험 발굴 사업이 부재하므로 정신건강 중심의 복지사각지대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시정
12. 1인가구커뮤니티 센터 관련 -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만족도 조사·지속참여율·사회관계 지표 도입이 필요해 보임. 또한, 전입가구 웰컴키트 제공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급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시정
13. 청년 ON 강남 행사 관련 - 청년 ON 강남 행사와 관련하여 청년 고립·고독감 관련 데이터가 없는 점은 아쉬운 점임. 청년 관련 사업 진행 시 그 취지에 맞는 사전·사후 조사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시정

[사회보장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노숙인 현장보호 활동반 예산 구조의 편중 개선 필요 - 노숙인 현장보호 활동반 예산 중 인건비가 96.4%로 과도하게 편중되었고, 노숙인의 자립·주거·연계 교육 등 실질적 지원 내용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예산 배분 구조 개선 및 실효적 지원방안 보완을 바람	시정
2. 노숙인 관리 및 순찰 활동의 민원·안전 위험요인 대응 강화 필요 - 강남역·코엑스·청담·신사 등 관내 주요 거점에서 노숙인이 존재하여 주민 불안··안전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대응·치안연계·보건 연계 등 공조 체계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주민 불안이 높은 지역(지하철·역세권·상업지 등)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순찰과 기동 대응을 지속해 줄 것.	시정
3. 상담·주거연계 실적 기반의 추가 지원체계 보완 필요 - 노숙인의 자립·치료·주거안정을 위한 연계가 개별 상담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거·생계급여 신청 연계·시설 입소 확대·상담 강화 등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체계를 보완할 것	건의
4. 노숙인 순찰 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근로자·보조인력 활용도 강화 - 현장 순찰 업무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해 근로자 안전장비·현장 대응 매뉴얼·긴급상황 대응 교육 등의 보완 필요	건의
5. 수의계약(1인 견적) 적용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 미흡 - 일반청소·특수청소·방역·소규모 집수리 등 여러 사업이 모두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지방계약법령의 취지(유사 사업의 수행능력 검증, 복수 견적 가능성 검토, 가격·품질 비교 등)에 어긋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
6. 시장조사·가격비교·경쟁성 검증 절차의 명문화 - 가격 적정성 및 과업 품질 확보를 위해 시장조사 방식, 비교대상 업체, 조사기준 연도, 물가 반영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것	건의
7. 동일업체의 복수 분야 수주에 따른 품질저하·독과점 방지 필요 - 청소·방역·집수리 등 서로 다른 분야를 동일 업체가 일괄 수행할 경우 품질 관리, 전문성·안전성, 이해충돌 방지가 필요하므로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약 구조 검토를 건의	건의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8.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무단침입 관련 보고 체계 개선 - 2024.2.11. 새벽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무단침입 및 차량 구조물 충돌·도주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안임에도 시설 관리·감독 주체인 강남구가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구청에 보고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관리 공백이므로 사건·사고 보고 체계를 즉각 전면 개선할 것.	시정
9. 여성보호센터의 미흡한 보호·보안 체계 시정 - 해당 시설에는 상주 130명 내외의 여성 노숙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타 복지시설(아동복지센터)이 존재함. 보호·보안·출입 통제 기준의 전면적인 점검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사건 발생 시 경찰·소방·구청 간 공조체계 점검하여 사건 대응 프로세스, 공조 절차, 사고 접수 흐름 전반을 재정비할 것. -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시설이 인접해 있어 위험 요인이 중첩될 수 있는 환경이므로 인근 복지시설 간 공동위험 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주변에서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출입관리·보안· CCTV 사각지대 순찰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시정
10. 시설 운영지침(보안·보고체계·출입관리)의 현행화 - 현재 운영 지침이 실제 위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보고 기준·시간·경로 등 구체적 절차로 명문화하기 바람.	건의
11.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관련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예산 일부 전용하였는데, 예산 전용으로 기존 탈수급 기능이 약화되지 않았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두 사업이 충돌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함.	시정
12. 희망저축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 희망저축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집행률이 69.7% 감소했으며, 홍보 내실화를 요청했음에도 개선 효과가 미흡함. 스마트복지관 등 홍보 채널 운영 방식 점검이 필요함.	시정
13. 부정수급 환수조치 관련 - 부정수급 환수 처리기간 및 환수율이 저조하여, 탈수급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시정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4.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 취약계층을 위한 소형가전 렌탈 등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사회보장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 줄 것	건의
15. 홈케어서비스, 세탁 및 짐보관 사업의 목표율 현실화 - 실제 이용 규모와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	시정
16. 홈케어서비스 관련 - 임대주택 관리주체와의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긴급 도배·도장 지원 프로세스를 명확화하기 바람. - 저장강박 가구 지원을 정식 매뉴얼화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 강화 신청방식을 전화·방문·동주민센터·복지플래너 연계 등 다채널로 확대하여 접근성 보완하는 등 부서에서 보유한 취약가구 DB를 활용해 선제적 발굴·연계 강화에 노력해 줄 것	건의

[어르신복지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논현동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점심 중단 문제의 근본 대책 마련 필요 - 논현동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의 잦은 휴무로 불편을 지속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급식 공간 확대, 인근 경로식당 분산 이용 체계 구축 등 실질적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함.	시정
2. 논현·세곡·역삼 등 인근 지역의 경로식당 분산 운영 검토 - 특정 경로식당 이용 폭증 및 잦은 휴무 문제 해소를 위해 인근 복지관·기부채납시설 등에 경로식당 추가 확보 필요	건의
3. 생활지원사 운영의 목표 대비 참여·모니터링 저조 현상 개선 필요 - 생활지원사 1인당 약 15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장 모니터링·상담 활동 외에 참여·자조 모임 등 사회적 활동 실적이 다른 사업 대비 낮은 수준임. 어르신들의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운영 체계 강화 요구	시정
4. 생활지원사의 어르신 관리 품질 강화 - 1인당 담당 어르신 15명 체계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 평가·상태보고 체계·집중 모니터링 기준 강화 등 제안	건의
5. 독거어르신 고립·우울·자살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발굴·연계 강화 -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어르신들 중 고립·우울·사회적 단절 위험군이 존재하므로 생활지원사 중심의 집중 발굴, 정서지원 프로그램 연계, 감시망 확대 등을 포함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체계 강화 요구 - 독거·은둔형 어르신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을 고려해 개별 맞춤 초대·소규모 활동·1:1 동행 지원 등 참여 촉진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시정
6. 경로당 공사 관련 - 경로당 공사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전기·소방·설비 등은 설계 단계에서 당연히 반영해야 하는 기본 요소임에도 매년 동일한 사유로 설계 변경·추가 공정 발생하고 있음. 공정 지연으로 인해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 예측 및 관리가 부족하고 민원 대응 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민원으로 인한 공정 지연이 반복됨. - 공정지연 원인에 대한 사전 리스크 관리 매뉴얼 마련 및 현장점검 강화하고, 전기·소방·통신·안전 관련 사항을 설계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체크하는 기술 검토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민원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주민설명회 및 협의 절차 강화하기 바람.	시정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7. 경로당 신축·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관리 강화 필요 - 최근 다수의 경로당 신축·개보수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사 지연·예산 증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설계변경은 시공사에 유리하게 작용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초기 계약 단계에서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계약조건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함. - 경로당·복지시설 공사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반복되면 예산 과다 지출 및 공사 기간이 지연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설계변경 발생 시 시공사 부담 원칙을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
8. 다수 경로당 신축·리모델링 공사에서 민원 대응체계 강화 - 민원에 따른 설계 변경·공사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시공사–구청–주민 간 조율을 강화하는 민원 대응 프로세스 개선 필요	건의
9. 대치4동 경로당 이전 추진 시 주민·경로당 회원 동의 절차 미흡 - 현재 선정지에 대한 주민 및 기존 회원 반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할 수 없으므로, 경로당 회원·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전제로 한 추진계획 재정비가 필요	시정
10. 예산 편성 시 사전검토·사전협의 등 철저 당부 - 장수축하금 지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결과 사업 내용이 조정되면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고, 추모의 집 사업은 신청률 저조로 매년 불용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폭염 대비 노약자 보호사업의 경우 시비 교부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구비를 편성함에 따라 구비 불용이 발생하였음. 예산 편성 시 사전검토·사전협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여러 변수와 시비 교부 시점 등을 예측하는 등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임.	시정
11. 노인복지시설 관련 - 매년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지도점검 결과를 재위탁 심사·제재 기준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컨설팅 등 지속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현장 중심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전반의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을 요청	시정
12. 경로당 노후 물품 관련 - 경로당 노후 물품 관리 실태가 불분명하므로 경로당 노후 물품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줄 것	건의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3. 노인일자리 관련 -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강남구민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미달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다각화하고 신규 참여자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 등을 강화해 줄 것	건의
14. 기초연금 미신청자 발굴 및 홍보 강화에 노력해 줄 것	건의
15.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 29개 기관 민간위탁 중인데 수탁기관에 어르신 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전년도 행감에 지적했는데 내용 파악 미숙은 물론 개선이 없음. 위탁기관 종사자 전수조사 실시하여 어르신 종사자 채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장애인복지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스마트홈 지원사업의 설치·철거·AS 관리기준 명확화 필요 - 스마트홈 지원이 대부분 영구 임대 등 임차 가구에 설치되며, 설치·철거 시 관리사무소, SH·LH와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명확한 설치 기준·철거 책임·장기 유지관리 기준이 미흡하므로, 설치–철거–사고·고장 대응–장기 유지관리에 대한 명문화된 관리체계 구축을 검토하기 바람.	시정
2.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 장애인복지관 특화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만족도·참여율이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며, 목표 미달 복지관의 원인 규명도 요구됨. 특화사업이 지역기관·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맞춤형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 재점검 필요함. 장애인복지관이 일상 회복 및 사회참여를 돕는 핵심 기관인 만큼, 질적 성장과 성과 공유 체계 강화가 요구됨.	시정
3. 강남구 시각장애인쉼터 관련 - 시각장애인 쉼터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접근성·운영시간·프로그램 다양성 개선 대책이 필요함.	시정
4.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련 - 전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더 많은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가점 반영을 제안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	시정
5. ICT기반 장애인주차관리시스템 관련 - '보호자 운전 장애인 동승 시' 확인 체계가 미흡하므로 사전등록·현장확인 등 대체 행정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시정
6. 스마트장애인복지관 관련 - 스마트장애인복지관을 통한 정보 제공이 장애인 당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탭 접근성 개선, 브라우저별 기능 강화 등 시스템 보완 요구	시정
7. 장애인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관련 - 강남구 장애인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정보취약계층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내 체계 구축이 필요함. 또한 장기적으로는 단순 예산 집행이 아닌 대상자 발굴–신청 지원–의료기관 연계' 전 과정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됨.	시정

[보육지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민간 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 질 균형 강화 - 부모 선호도가 국공립에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민간 시설의 시설개선·운영비·구입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 강남구 전체의 보육 품질을 균형 있게 높일 것	건의
2.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 관련 - 교재·교구비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구조는 보육 품질 향상과 조기 지원 필요성에 맞지 않음.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 목적을 고려해, '상반기 조기 지원 → 후반기 추가 지원' 등 탄력적 집행 체계를 마련할 것	시정
3.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의 '수의계약' 타당성 문제 - 대다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데, 유사 공사를 묶어서 경쟁입찰로 진행 할 경우 단가 인하·품질 개선이 가능하므로 내년도 사업부터 묶음 발주를 확대할 것	시정
4. 보육교사 장기근속 환경 조성 관련 - 보육 교직원의 안정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 교사 평균 근속기간이 10년 이상 어린이집이 없는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함.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 인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 점검이 요구됨. 강남구가 지속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무 여건과 실질적 처우 개선이 계속 강화되길 당부함.	시정
5. 공동육아나눔터 관련 - 공동육아나눔터는 프로그램 표준화 및 이용자 만족도 중심의 운영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관·육아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강화로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 바람.	시정
6. 0세반 증설 관련 - 0세반을 증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인책이나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해 보이므로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영아반 교사 확보와 운영 부담 해소 방안을 구체화할 것	건의
7. 어린이집 불법 증축 관련 - 2003년에 있었던 어린이집 불법 증축에 대해 20년이 지나서야 발견한 점은 부적절함. 보육지원과가 매년 많은 공사를 시행하는 만큼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기적·상시적 감사 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공사 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 강화, 공사 후 현장 확인 절차 의무화하는 등 보육시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수 점검 및 예방 감사를 확대할 것	시정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8. 유보통합 관련 -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비해 강남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단계별 시나리오 마련과 TF 구성 등 적극적 대응 전략이 필요함. - 유보통합 준비 부족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의·타 자치구 사례를 참고하여 대안 마련과 선제적 준비가 요구됨.	시정

[가족정책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자립준비청년 발굴·지원 체계의 사각지대 보완 - 자립준비청년 39명이 통계상 파악되고 있으나 전출·전입 여부만으로 관리될 경우 비자립·취약청년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거·생계·정신건강 등 복합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적극적 발굴 체계로 보완할 것	시정
2.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확대 - 현재 주거지원은 2가구에 불과함.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LH·SH 매입임대 활용을 통해 추가 주거지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	건의
3. 자립수당·생활물품·취업축하금 등 맞춤형 지원 확대 검토 - 자립준비청년은 매우 취약한 계층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항목을 확대하거나 단가를 조정할 것	건의
4. 자립준비청년 관련 - 현재 39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례 중심의 밀착 관리가 부족함. 정신건강·월세 지원 등은 이뤄지고 있으나 당사자와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함. - 소수 인원인 만큼 개별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위험 해외취업 사례 등 발생 위험을 줄이는 안전망 확보가 필요함. 구청이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며 청년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는 체계 구축이 요구됨.	시정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인원 증가 대비 취업률 제고 방안 검토 - 양성 인원 115명에서 160명으로 증가했지만 취업률은 51%로 낮은 수준임. 교육–매칭 과정의 개선, 참여자 사후관리, 구직 연계 강화 등 양성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양성 후 매칭 과정에서 이탈을 줄이고 건강관리사 근무 환경 및 인식개선, 수요기관 매칭 확대 등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제도 보완 필요	시정
6.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 - 여러 부서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복지원 및 누락 방지 체계를 정교하게 운영해야 함. 다문화·저소득·한부모 등 취약 임산부에 대한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 필요	시정
7. 아동친화도시 관련 - 6개 분야·42개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성과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가 요구됨. 놀이·안전·참여 등 아동친화 정책 추진 시, 동별 인프라 격차 분석 및 취약지역 우선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시정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8.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관련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과다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상한, 신고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기 바람.	시정
9.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관련 - 공공생리대 재고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배포 주기·시기를 명확히하고 재고 부족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속 보충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시정

[자원순환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정화조 관련 - 현재 수거업체는 이미 2027년 6월까지 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최근 조례 재상정 요구와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의회·집행부 모두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조례 개정 요청의 실질 목적이 ① 문구 정비 ② 요금 인상 필요성(2017년 이후 동결) ③ 특별 사유 없는 재계약 조항 삭제 등이라면, 명확히 공개하여 정치·사회적 오해 방지 필요 - 기존 수행업체·신규 진입업체 모두 불공정 논란 가능성 존재하므로, 가점기준·평가항목 등 공정성 장치를 마련하고 법제처·법무팀 등 제3기관 자문을 통한 개정안의 타당성을 반드시 확인할 것	시정
2. 정화조 요금 인상 논리에서 '타 지자체와의 단순 비교'는 부적절함 - 타 지자체는 좁은 골목·진입제한 등의 구조적 이유로 작업 여건이 상이하므로 강남과 동일 비교를 통한 단가 인상 논리는 타당성이 부족함. 따라서 강남의 도로여건·투입시간·접근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단가 산정 기준 마련 필요	시정
3.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교육 강화 필요 - 현장 특성상 산재·부상이 지속 발생하여, 정기 안전교육의 실효성 강화, 위험작업 매뉴얼 보완, 기초·보호장비 보급 확대 필요	시정
4. 무단투기 단속반 인력 축소에 따른 관리 공백 우려 - 무단투기 예방 사업 집행률 저조함. 인력 감축이 있었다고 하나 관광객·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특성을 고려하면 단속 인력 감소는 청결도 저하 및 방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인력 유지 필요 - 유동인구·관광객 많은 지역을 고려해 단속 인력 감축 계획을 재검토하여 청결도 유지 기준을 강화할 것	시정
5. 폐식용유 수거기기 도입 방식 다변화 검토 - 가정 배출 식용유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 외에 다른 구조(용기 수거형 등) 또한 비교 검토해 도입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으니 검토하기 바람.	건의
6. 연중 조기 집행을 통한 청소·감시 서비스 안정화 - 다수의 사업이 4분기 집행되고 있는데 조기 집행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것	건의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7. 환경미화원 안전 교육 관련 - 환경미화원의 안전은 구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임.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이 단순 의무교육이 아닌 시나리오 기반·실습형 교육으로 실시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사고 분석·현장 의견·만족도 반영을 포함한 사후 관리체계 구축 및 2026년 교육 고도화 계획 마련이 필요함. 안전교육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훈련과 지속적인 사후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람.	시정
8. 가로휴지통 랩핑 관련 - 가로휴지통 랩핑이 혼합배출 감소 효과로 이어졌는지 그 성과에 대한 정량적 지표와 분석 방식 제시가 필요해 보임.	시정
9. 재활용 선별률 관련 - 강남환경자원센터 총 반입량 대비 실제 재활용량에 대한 동별, 지역별 통계가 마련되어야 재활용품 분리개선, 계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
10. 청소 대행 업체 관련 - 청소대행업체의 미화원 인원 부풀리기 없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임. 환경미화원 관련하여 사전, 사후 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공무원이 암행 순찰하여 실제 근무 인력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시정
11.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 사업 관련 -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가정용 소형감량기의 렌탈료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민 수요를 반영한 지원 확대 검토하기 바람. 또한 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인프라 개선, 구 전체의 분리배출·감량 문화를 확산을 위하여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시설까지 소형감량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정

▢ 미래문화국

[디지털도시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스트레스 프리존(대치동) 시설의 반복적 파손 관련 - 총 사업비 6억 8천만 원이 투입된 지 2~3년 만에 목재 파손, 금속 부식, 스피커·체험기기 기능 이상, 시트 파손 등 심각한 수준의 시설 훼손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초기 설계·자재·시공 품질 검증이 부족했고 AS 기간도 짧게 설정됐던 점이 문제로서 하자보수기간·기준을 시설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 전면 재점검할 것 - 잦은 파손(목재, 금속, 스피커 등)에도 불구하고 보수 기준 없이 시설 노후, 반복 보수가 되풀이되는 예산 낭비 구조임. 내구성 기준을 강화하고, 하자보수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	시정
2. 스트레스프리존 보수 시 '이용행태'를 반영할 것 - 학생들의 강한 행동 패턴(고음, 타격 등)을 고려한 내진·내구 중심의 보수 필요	건의
3. 하자보수 기간·AS 기준을 '나라장터 일률적 기준'이 아닌 시설별 수명 기반으로 조정 - 사업 특성상 2~3년 내 고장 나기 어려운 품목임에도 AS가 일률 1년으로 설정되어 공공 재정 손실 우려가 큼. 향후 유사 사업은 설비 수명·내구성 평가를 반영한 계약조건(AS 3~5년 등) 검토 필요	건의
4. 흡연 민원 다발 지역(도곡동 군인공제회관 일대) 현장 재점검 및 우선대책 마련 - 군인공제회관(도곡동 467-7) 일대는 연중 지속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금연거리 지정 후 흡연이 이면도로로 이동하면서 상가 영업 피해가 커졌음. 현장 조사 후 흡연 유도구역·흡연부스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협조를 통한 민원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
5.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흡연 동선 관리' 및 재떨이 비치 추진 - 금연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담배꽁초가 빗물받이·하수구로 투기되는 사례가 많아 환경오염·도시미관 훼손·기후대응 차원의 문제 야기할 수 있으므로, 비흡연자와 흡연자 동선을 분리하고, 지정구역이 아닌 곳엔 최소한 재떨이 설치 검토 필요	건의
6. 미래산업 기반 기업활성화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 미선정 사유 명확화 - 공모 참여 기업 선정 지연 및 매칭 진행 불투명한 구조로서, 예산집행률은 낮으나 "사업은 진행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은 적합하지 않음. 기업 미선정 사유, 공모홍보 계획, 연내 매칭 결과 제출 할 것	시정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7. 강남 모바일 플랫폼 기능 개선 필요 - 신규 콘텐츠 보강, 현장 QR 서비스 확대 등 체험형 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해 줄 것	건의
8. ESG 사업 관련 - ESG 사업 추진 시 사업 목적·대상에 맞는 적절한 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 할 것	시정
9. 미디어캔버스 조성사업 관련 - 미디어캔버스 조성 사업과 같이 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부지·시설 사용 가능 여부 철저 검토할 것	시정
10. 미디어캔버스 조성사업 관련 - 설치된 디지털 시설이 현장별 사용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명·음향·콘텐츠 등 환경 요소가 이용자 의견과 민원을 반영하여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또한, 최근 디지털 아트·전광판 등 시대 흐름에 맞는 콘텐츠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각적 효과와 공공성 모두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 확대 방안 마련을 요청함.	시정
11. 온라인 설문조사 관련 - 온라인설문조사 시스템은 고령층이 회원가입·로그인 등 접근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고령층 참여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검토할 것. 또한 설문 참가자의 강남구민 여부 확인 방법을 마련하여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임.	시정
12. 공중화장실 안심디자인 프로젝트 관련 - 공중화장실 안심디자인 프로젝트 관련 설계변경, 예산 전용 사유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이러한 변경이 초기 계획 대비 일정·추진 방식에 미친 영향도 명확히 분석해야 함.	시정

[스마트정보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어르신 대상 정보화 교육(특히 65세 이상) 참여 확대 필요 - 65세 이상 어르신 8만 5천 명 대비 어르신 특화교육 300명, 찾아가는 교육 62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경로당·복지관 홍보 강화, 동별 특화반 신설, 교육시간 확대 등 실효적 교육 확대 방안 마련할 것	시정
2. AI·챗GPT 포함 디지털 역량 교육의 난이도 조정 및 확대 -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맞춤형 난이도 조정, 반복·심화 교육을 강화할 것	건의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최근 민간 해킹 사고 확산 속에서 각 부서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절차가 적절한지 점검이 필요함. 예산 집행과 정보보안 성과가 연계되도록 투명성과 효율성을 함께 강화할 것을 당부함. - 최근 공공기관 전산실 화재 사례를 고려할 때, 강남구 통합전산실의 화재감지·차단 장치, 이중전원 및 백업 체계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전산 장애 발생 시 구민 행정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으므로 재해 대비를 강화해야 함.	시정
4. 인터넷전화 및 정보통신시스템 장애 발생 관련 - 매년 반복되는 인터넷전화 및 정보통신시스템 장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장비 노후화 교체·부하 감시 등 사전 예방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 바람.	시정
5. 구청장에게 바란다 관련 -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국민신문고 통합으로 개편되면서 소통 창구가 축소됨. 다른 자치구는 여전히 민원 게시 기능을 유지한 곳도 있으므로 국민신문고와 별도로 강남구 자체 소통 채널 복원 또는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시정
6. 정보화 교육 관련 - 챗GPT 교육, AI 공모전, OA 교육 등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과 장애인·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가 필요함.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낮은 만큼 찾아가는 교육 및 중장기 정보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시정
7. 정보화 교육 관련 -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각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민센터·외부기관과 중복되지 않는 특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및 콘텐츠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교육의 차별성을 강화할 것. 또한 전업주부 수강료 50% 감액(7,500원) 기준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감액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	시정
8.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관련 - 호응도가 좋은 사업인 만큼 확대 추진을 검토해 줄 것	건의

[문화도시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강남문화원 관련 - 강남문화원에 대한 감사담당관 감사 이후 혼선이 지속되어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시정조치 및 운영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 수강료·보조금 관련하여 정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법령 근거 안내 및 사실 관계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 - 보조금 집행·정산 과정의 사전 점검 및 사고예방 교육을 실시 할 것	시정
2. 강남문화원 관련 - 강남문화원 감사 실시 결과와 환수, 후속조치 전반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도덕적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하고 2024년 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나온 만큼 감사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건의
3. 청년 국악 관현악단 관련 - 청년국악단 창단 예산 1억 3,200만 원을 사전 설명 없이 전액 불용한 문제의 원인과 향후 추진 계획을 명확히 설명 바람. 국악 행사가 축소되고 관현악 중심으로 편중된 운영을 개선하여, 양악·국악이 균형 발전하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시정
4. 문화예술 균형 발전 관련 - 문화도시과가 관현악과 국악이 서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두 분야를 균형 있게 진흥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건의
5. 인문학콘서트 관련 - 2025년 행사 형식 다양화에 맞춰 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할 체계를 마련하고, 인문학 콘서트는 단기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내실화해야 함.	시정
6. 신진문화예술작가 지원사업의 사업명·요건 불일치 시정 - 신진문화예술작가 사업임에도 5년 경력 기준 적용, 상금 축소 및 구조 변경으로 사업 목적과 실 운영 간 보이는 괴리 해소가 필요함. 신진성 기준 명확화, 공모·전시 사업 분리 검토, 청년작가 지원 폭 확대 등 신진작가 사업의 명확한 개편을 검토 바람.	시정
7. 행복콘서트 관련 - 행복콘서트 예산을 동일 사유로 2년 연속 전용하였는데 반복 전용이 발생한 계획상의 문제를 개선할 것	시정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8.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보조사업 관련 -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의 불용률이 높고 보조금 집행 미준수 지적사항도 상당함. 문화원·문화단체·박물관·미술관 등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 할 것	시정
9. 안창호 기념관 이전 관련 - 안창호기념관 이전·정비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부서 협업 구조 개선 및 일정 단축 방안 마련할 것	시정
10. 수변문화쉼터 관련 - 부서 간 소통 부족으로 수변문화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변경이 있었고 변경 사항이 설계 등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 로봇카페 시설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공연·전시에 맞지 않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등 아쉬운 부분이 상당한바 전반적인 운영 문제를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

[생활체육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국기원 냉난방·급탕시설 개선사업 집행률(0%) 보고 오류 또는 지연 원인 명확화 - 보고서상 집행률 0%이나 실제는 냉난방 공사 완료, 급탕 공사 약 80% 진행 중이라는 답변과 불일치하므로 자료 정합성 점검 및 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	시정
2. 강남국제평화마라톤의 글로벌 대회화 전략 검토 - 2024년 참여 인원 약 1만 명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안전사고 없이 운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챌린지형 하프·풀코스, 간선도로 활용 등 세계적 브랜드 대회로의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것	건의
3. 강남국제평화마라톤 관련 - 국제평화마라톤 참가 인원 증가는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요원을 예상 참여자의 1.5배 이상 확보하고 안전요원 확보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또한 수요예측 및 인원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민원 대책을 보완할 것	시정
4. 구민체육대회 관련 - 구민체육대회 참여 인원 모집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그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 - 동별로 식사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현황조사 강화, 여분 식사 마련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시정
5. 체육회 관련 - 체육회 감사 결과 보조금 부실 정산, 집행 미준수 등 지적 사항이 상당함. 동일 지적 사항이 재발 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해 정산 체계 개선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또한 특정 종목에 지원이 집중된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 종목별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시정
6. 체육시설 안전점검 관련 - 위험도 높은 체육시설의 재점검 주기와 행정조치 기준을 명확히 운영해야 하며,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함.	시정
7. 스포츠 바우처 사업 관련 -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대상자 발굴·신청 절차 개선·시설 확대 등을 포함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 필요.	시정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8. 파크골프 관련 - 현장 접근성 개선 및 홍보 강화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파크골프장 등 수요가 높은 시설 확충을 적극 검토해야 함.	시정
9. 탄천파크골프장 관련 - 탄천파크골프장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인근 주차난도 심각하여 텃밭 이용자와 파크골프 이용자 간 충돌이 발생한 바 있음. 파크골프장 이용 증가에 맞춰 노상주차장 확보 등 근본적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관광진흥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강남페스티벌 관련 - 강남페스티벌 관련 예산이 특정 사업에 집중된 만큼 예산 편중을 완화하고 행사 간 균형 있는 배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강남페스티벌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분석 등 행사 효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 방문객·참여자 수 집계에서 부서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계 기준을 통일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기 바람.	시정
2. 관광 활성화 관련 -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소비·체류 확대가 정체되어 있어 국가별 특성에 맞춘 체류형 프로그램과 거점별 소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민간기업·숙박·의료·문화기관 등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함.	시정
3.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 K-컬처 강점을 살려 외국인 유입을 확대하고, 대사관 홍보·강남메디컬센터 연계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함.	건의
4. 가로수길 행사 효과 검증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체계 구축 등 - 가로수길 상권 쇠퇴(공실 약 50%)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만 반복되고 있으며, 매출·유동인구 등 경제효과 데이터를 집계하지 않아 정책 근거가 부재함. 2025년부터 행사별 매출·유동인구·파급효과 측정 지표를 마련하고 정례 보고 체계 구축 필요 - 주민·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있어서도 간담회·설문조사·회의록 등을 공식 절차로 운영·보관하도록 개선할 것	시정
5. 가로수길–골목형상점가–K-POP·문화행사 연계 추진 건의 - 디자인위크·콘서트 등 개별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경제과·문화도시과와 연계한 상권 통합 기획 필요.	건의
6. 소규모·분기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중 상권 활성화 건의 - '연 1회 대형 행사'에서 '월 1회·분기 1회 정례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권 회복의 지속성 확보할 것	건의
7. 메디컬강남 나눔의료 사업 확대 및 국가별 협력 전략 구축 요구 - 현재 5개국 6회 실적에 머물러 있어 국익·홍보 효과 대비 규모가 작음. 매년 참여국을 확대하고, 대사관·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 연도별 확대 필요	시정
8. 메디컬강남 해외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건의 - 해외 방송·SNS·다큐 제작 예산 확대를 통해 강남 의료기술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향 제시	건의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9. 의료관광 협력기관 인센티브 제도 강화 요구 - 현행 단순 평가·인증 방식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온라인 홍보, 플랫폼 상위노출, 교육·컨설팅 등 실질적 혜택 중심의 등급제로 개편 요구	시정
10. 의료관광 협력기관 대상 인센티브·공동마케팅 확대 건의 - 우수기관을 선정해 홍보·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	건의
11. 의료관광 협력기관 관련 - 협력기관 보조금 지원(홈페이지·SNS 홍보 등)에 대해 특혜 여부와 실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협력기관 지원은 성과 연동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확보할 것	시정
12. 의료관광 플랫폼 관련 - 의료관광 플랫폼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 등 성과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성과평가체계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건의
13. 한류스타 조형물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 조형물 중 일부는 그룹 해체·활동중단 상태임에도 동일하게 유지관리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 조형물 관리 기준이 없어 '연례적 유지보수 → 예산 투입 반복' 구조 지속되고 있음. 내년 정기점검 시 '정비/교체/철거' 기준 마련할 것 - 해체된 그룹의 방문 팬이 있다면 객관적 통계가 필요할 것임. 일부 그룹이 너무 오래되어 올드해 보이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아트돌 변경 기준·유지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기 바람. - 한류스타 거리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아티스트 교체 로드맵 수립할 것	시정
14. 메디컬투어센터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대책 강화 - 불법 가설물 연장 신고 지연, 전기 컨트롤박스 부식·위험 방치, 식품위생법 미이행, 구조 안전진단 지연 등이 다수 지적됨. 설계변경 절차 준수 및 근거자료 작성을 철저히 하고, 담당자 직무교육 의무화 및 재건축 지연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장기 존치 여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판단할 것	시정
15. 감사담당관 감사 지적 사항 관련 -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보조금 사업 및 용역계약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적이 있었음. 감사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또한 수의계약·재계약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적업체 재계약 방지 기준을 마련할 것	시정
16. 둘레길 사업 관련 - 둘레길 표지판 온라인 콘텐츠 활용 등 확장 가능성 검토 바람.	건의

▢ 강남복지재단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새로운 상임이사가 부임한 만큼 그간의 지역사회 활동 노하우를 담아 재단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잘 운영하기 바람	건의
2. 재단 경상비 증가에 대한 관리 필요 - 구청 파견 인력 축소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경상비 구조 개선 및 재정 건전화 필요	시정
3. 후원금·후원 물품 목표 설정 기준의 현실화 검토	건의
4. 재단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 다각화 추진	건의
5. 재단 홍보 사업 관련 - 지면 광고의 경우 광고비 대비 실질적 홍보 효과가 충분한지 분석하고 매체 홍보가 후원자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성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충주맨 사례처럼 디지털 홍보 전략을 강화하여 강남복지재단의 브랜드 활성화를 도모하기 바람.	시정
6. G-CARE 사업 관련 -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 진행하는 사업이니 구체적 실행계획과 일정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건의
7.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이행 실적 관련 - 경영실적 및 성과계약 이행실적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함. 복지재단 출범 10주년임에도 성과가 저조한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개선 노력이 필요함.	시정
8. 미래세대 지원 사업 관련 - 교육지원과 사업과의 목적·대상·지원항목 중복이 지속되고 있어 차별화 기준이 불명확함. 장학금·심리치료 등 유사 사업의 통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복지정책과에서도 장기적으로 통합·정비 필요하다고 답변한 만큼 중복 사업 정리 및 차별성 확보를 위한 구–재단 간 조정이 필요함.	시정

▢ 강남문화재단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1. 수변문화쉼터 관련 - 수변문화쉼터를 재단이 운영을 맡기로 한 시점과 실제 준비 과정이 불일치한 만큼 운영 준비 미흡 문제를 개선할 것. 개관 전 운영계획·인력배치가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운영 프로세스를 정비할 것 - 상주 운영 인력이 없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운영 인력 배치 체계를 재정비하기 바람. 시설 총괄이 24시간 상주하는 운영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운영시간 외 상주 인력 배치 조정을 검토할 것.	시정
2. 후원금 관련 - 재단 후원금 사용이 구의회 보고나 승인 없이 집행되는 점, 5.5억 원이 K-가곡 슈퍼스타 제작비로 사용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장 시상 참여의 적절성도 검토하기 바람. 또한 후원금 집행 시 대외 공유·보고 체계를 마련할 것.	시정
3. 기부심의위원회 관련 - 기부심의위원회 구성에 내부 인사가 많기 때문에 심의의 독립성·투명성을 위하여 외부성·독립성을 강화할 것	시정
4. 문화재단 사업 발굴 노력 -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재단의 사업이 센터 관리와 반복적 공연 사업에 치중하고 있음. 새로운 사업 발굴과 지역 문화공간 사업 부족 문제(특히 강남 이남 지역)에 대한 개선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
5. 재단 운영 전반 - 경영평가가 2년 연속 '나' 등급이므로 경영평가 등급 개선을 위해 지표 중심의 내부 관리 강화하기 바람. - 위수탁 사업 규모와 중장기계획 미흡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사업 구조와 계획을 정비하기 바람.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고 반복 지적을 해소할 실행 체계 마련할 것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외부 위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검토하기 바람. 또한 기술직 업무에 비전문 인력이 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문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사·채용 체계 정비 및 내부 인력 운영 개선할 것	시정
6. 경영지원팀 인력 부족 해소 및 조직 안정화 대책 필요 - 정원 17명 중 9명만 근무(8명 결원)로 정상적 경영지원 기능 수행 불가한 규모로 판단되며, 출산휴가·육아휴직 집중에도 대체인력·전보 조치 미흡하므로 긴급 인력 보완(기간제, 파견 등) 및 조직개편안 즉시 마련할 것	시정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비고
7 문화센터 강사 관리·계약 구조 개선 필요 - 승급 기준이 불명확하고 갑질·부적격 강사 해지 어려움 등 관리 체계 미흡하므로 계약서에 해지·재계약 제한 근거 명시 및 평가 기준 등 공개하기 바람. 또한 강사 전문성 검증 인력풀 확대 및 우수강사 유치 전략 마련할 것	시정
8 강남구 관현악단의 단원 평가체계 투명성 확보(상대평가 구조 개선) - 공정성 논란 가능한 구조이므로 평가위원 다원화 필요	시정
9. 예술단 운영계획(편성·공연·홍보) 정비 및 보고 바람	건의